

[제14차 아셈노인인권전문가와의 라운드테이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노인인권

일 시: 2023년 12월 1일 오후 4-6시

참석자: (좌 장) 이해경 이사장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참석자) 박영란 교수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Arne Henning Eide 박사 (노르웨이 SINTEF 연구소 수석과학자)

Carol Ma 교수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 사회노년학과)

Takeo Ogawa 명예교수 (일본 규슈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anina Stiel 박사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 **주요 발표 내용**

[Arne Henning Eide 박사: 취약층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노인의 디지털 포용]

노르웨이와 기타 국가의 관점에서 본 노인의 디지털 포용

- 디지털 기술과 노인인권이 결부되는 근거

오늘날 발전된 경제 내에서, 디지털 포용은 포용, 접근 및 참여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평생교육과 같은 수많은 메커니즘에 참여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과 접근성에 달려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도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법이 디지털화되었는데,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일이며 10~1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비스 접근은 디지털 도구와 기술에 달려있습니다. 노인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은 건강 정보 & 서비스, 생활방식 및 웰니스, 심지어 오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접근 또한 디지털 도구와 경제적 웰니스에 달려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에 디지털 접근을 할 수 없는 노인은 경제적 상황, 고용, 근로 참여, 사회 참여 및 사회적 관계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기술이 없다면, 디지털 소외, 접근성 부재, 사회적 참여의 제한 및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노인이 접근 가능한 디지털 기술 개발하기

노르웨이는 매우 디지털화된 국가이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 특히 노인이 디지털 소외 현상을 겪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인프라(인터넷 연결,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와 함께, 시장 메커니즘은 노인의 디지털 참여(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지식 및 기술)가 가능하도록 접근성과 도구를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 규제 및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모두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향한 밑거름이 됩니다.

‘노르웨이 노인의 인터넷 접근성과 사용’ 도표에서 나이가 들수록 그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접근성에서 연령 변화도(age-gradients)가 관찰됩니다.

인터넷 사용 도표에서는 많은 노인이 활발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0% 이상 노인은 인터넷 활동 중 몇몇 부문에서 그다지 활동적이진 않습니다.

노르웨이 공공 서비스 부문의 대부분이 디지털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60%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5%의 노인이 온라인 공공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이 스스로 가지는 기술과 지식에 대한 관점이 문제의 큰 부분인 동시에, 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디지털화와 기술 발전에 부정적인 입장이 18%를 차지합니다.

미국 노인의 디지털 접근 증가 추세는 긍정적인 발전을 뜻합니다. 인터넷 적용률은 12%에서 67%까지 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수치는 60%입니다. 다양한 수치가 관찰되는 것은 인터넷 접근성이 국가별 경제 발전과 관련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과 가정 브로드밴드의 사용에 있어 연령 변화도가 관찰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접근율이 더 감소함을 뜻합니다.

- 권고

- 대다수 노인은 디지털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내 노인 디지털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비사용의 이유는 다면적이므로 인터넷 비사용에 관한 접근법 또한 다면적이어야 합니다.

- 노인의 디지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와 기술 이전(skills transfer)이 요구됩니다.

- 노인의 디지털 참여 촉진 전략은 맥락에 맞아야 하며, 국가의 경제력과 같은 구조적 상황 내에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 장애물 극복하기

- 노인의 디지털 포용 보장은 5가지의 핵심 장애물(접근성, 설치, 지식, 디자인, 믿음)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 낮은 가격의 고속 인터넷 및 도구, 설치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디지털 연결을 위한 근간이 됩니다.
- 디지털 이용자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과 유관 기술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Janina Stiel 박사: 디지털 격차 다루기 - 디지털화 정책을 통한 독일의 노인 권한 강화]

평생교육과 디지털 기술 측면에 집중하여 발표하겠습니다.

• 아젠다 1. 독일 노인의 디지털 포용

사실과 수치: 2023년 독일 인구는 8,400만 명이며, 그중 2,500만 명은 60세 이상 노인입니다(전체 인구의 30%). 2,500만명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700만 명이 인터넷 비사용자입니다(28%). 인터넷 비사용자의 비율은 60~69세 노인층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8%). 그러나, 젊은층과 노인층 사이에 존재하는 디지털 격차보다 노인층 내의 디지털 격차가 더 심합니다. 저소득, 저학력, 건강 제약, 장애, 이주 배경을 가지며 홀로 사는 여성이 인터넷 비사용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SIM 연구 2021 및 D21 디지털 인덱스에 따르면, 온라인 비사용자가 되는 이유로는 인터넷에 대한 불신, 경제적 이유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주는 이점을 인식하게 되고, 인터넷 사용 시작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많은 노인이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노인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초급자에서 자신의 지식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불균등하게 적용됩니다. SIM 연구 2021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4명 중 1명이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한 수준의 컴퓨터 지식(24%), 스마트폰(22%) 혹은 태블릿(17%)을 갖췄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유럽 노인 65~74세를 대상으로 한 Eurostat 2022 조사에서 인터넷 비이용자(offliner) 비율이 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독일은 17%, 유럽연합 평균 수치는 26%입니다.

- 아젠다 2. 국제, 국가 프레임워크 내 명시된 노인의 교육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

- 지속가능개발목표 4 "양질의 교육": 포용적이고 공평한 품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촉진함.
- 노인의 교육 받을 권리는 독일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차별금지법은 연령차별을 금지함.
- 사회법: 지방 정부는 노인에게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함. (71 SGB XII)

독일은 노인 교육 전략을 아직 갖추고 있지 않은 실정임.

•아젠다 3. 국제적, 국가적 프레임워크 내의 노인 디지털 리터러시

1.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PA) VI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 (NAP, 2017): 평생 교육 및 학습을 촉진함. (...) 신기술 가운데 특히 본 맥락에 맞는 신기술에 방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 실시. 노인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전략과 실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은퇴 교육 기관이 노인의 요구에 맞도록 조정해야 함.
2. 유럽경제위원회(UNECE) 각료 선언 (2022); 조 24: "노인의 공식, 비공식적인 배움의 기회를 투자하고, 활성화하여 직업적 교육을 넘어서 노인이 성취감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개선함.
3. 독일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of Germany) (2022): "장수사회에서, 노인 교육은 특히 중요하므로 노인층의 자신감 있는 디지털 사용을 강화함."
-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 (독일)2020 의 디지털시대의 노인인권, 노인참여, 노인웰빙에 관한 결론
20. 노인은 공공, 사회 및 문화생활에서 완전한 참여권을 가지며, 교육, 지속적인 훈련 및 평생학습에도 동일한 권리를 지님. 디지털 활동은 점점 더 활동적인 사회, 문화 및 경제 참여를 보장하고 포용을 촉진하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됨. (...)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함.
29. 디지털 세계 내 노인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시민 사회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메커니즘을 개발함.
33. 다양한 형식의 교육 및 훈련, 평생 교육 기회 및 과학 기술적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강화한다. 이러한 교육, 훈련

및 기술 개발은 디지털 세계와 사회생활 참여에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과 남성 간 디지털 격차 해결에 쓰여야 함.

34. 의료, 복지, 장기돌봄서비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와 관련한 디지털화를 가능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배리어프리(barrer-free)방식으로 형성해야 하며, 비-디지털 형식의 서비스 또한 남아있어야 함. (...)

37. 대안적 수단을 통해 디지털 기술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는 이들 또한 똑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함.

•아젠다 4. 전문가 권고: 제8차 정부 노인 보고서 “노인과 디지털화” 2020 (독립전문가 위원회 집필)

권고 사항 20개 중 집중할 부분

1. 연방정부의 “디지털 전략”내 노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우선 지침의 비율을 늘림.

2. 모두를 위해 디지털 기술 사용 접근을 가능하게 함.

4. 디지털 기술이 노인과 노인 돌봄자의 돌봄 관련 욕구에 있어 디지털 기술이 좋은 기회임을 이해함.

9. 디지털 기술 연구와 디지털 기술 개발이 노인의 기술, 욕구, 요구 사항을 고려하도록 보장함.

10. 혁신과 혁신 이전을 위한 충분한 재정을 보장함.

•아젠다 5. 모델: 노인을 위한 디지털 협정(2021-2025)

제8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1년에 시행함.

- 디지털화에서 기인한 기회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제고함.

-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노인의 접근성을 활성화하고 권한을 강화함.

- 디지털 리터러시 촉진을 통해 사회참여를 보장함.

독일 정부는 정치, 경제, 시민사회 분야를 연결하여 노인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여 개의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는 300곳이

노인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는 낮은 문턱을 지녀 개인 간 교육을 위한 장소가 될 것이며, 정부는 장비 구매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결론: 노인의 디지털 습득을 위해 기술 숙련도와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포맷에 따른 배움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비사용자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선택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다양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노인의 교육을 증진하고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큰 노력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성공적인 모델이 많이 시행되었으므로 이제 큰 규모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Carol Ma 교수: 건강한 나이들을 위한 보조 기술 접근성 높이기]

UN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싱가포르 시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2050년에는 2명 중 1명꼴이 됩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기간은 10.57년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주제는 삶의 질 유지와 건강한 나이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며 이동 능력, 자기돌봄, 기억 능력, 청각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하락합니다. 싱가포르의 기대 수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노인이 집에서 나이들 수 있게 하는 전략과 교육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노인 통합돌봄(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ICOPE)을 채택하고 있는데, 노인의 기능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간중심 건강 및 사회 복지를 위한 커뮤니티 주도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적 기술은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최신 연구인 '싱가포르 노인의 내재적 역량 손상 정도'에 따르면, 노인의 77.4%가 6가지의 내재적 역량 (시력, 청력, 인지능력, 이동 능력의 저하, 영양실조, 우울증 증상) 중 적어도 한 분야에서 손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국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시력 손상, 청력 손상, 인지능력 저하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조적 기술은 내재적 역량 손상을 가진 노인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노인의 기능, 자율성 및 독립성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조적 기술 내 돌봄의 접근성에 대한 6요소 (6As)

Penchansky and Thomas 프레임워크 수정본(1981)을 보시면, 노인의 욕구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보조적 기술에서 경제성, 용인성, 이용 가능성, 주거, 수용성, 접근성, 타당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싱가포르의 보조적 기술 접근 지원책: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 시니어 고 디지털 프로그램, 접근성 이네이블링 팀 (GovTech's Accessibility Enabling Team), 홈 액세스 프로그램, 시니어 이동능력 및 펀드(SMF), 주거 개발회 (HDB), 스마트 이네이블드 홈, 보조적 기술 펀드(AFT)

커뮤니티 주도 이니셔티브: 제론테크 대사(gerontech ambassador) 교육

- 싱가포르의 건강한 나이들을 위한 보조적 기술 접근성 촉진 전략
1. 보조 기술 사용에 있어 노인의 의견을 고려함.
 2. 보조 기술 적용에 있어 노인의 의견과 선호도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
 3. WHO 권고에 따른 노인의 존엄함과 존중, 참여와 포용, 안전과 보안, 사생활과 데이터 보안, 교육과 접근성, 건강과 웰빙의 권리를 보호함.
 4. 노인의 사용자 경험을 고려함.
 5. 협력을 위한 범사회적 접근법을 적용함.

[Takeo Ogawa 교수: 보조/복지 기술 공공 접근성 확장을 통한 일본의 노인인권 강화]

- 고령화 전 사회(1960-1968): 일본의 국민 보장법이 일본의 국민을 책임졌으며, 국가 연금법, 국가 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근간이 되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 고령화사회(1970-1995): 일본은 장기돌봄센터 보급법(1992)과 같은 새로운 업적을 세웠는데, 이러한 법은 가족 돌봄자, 일선 돌봄자 및 돌봄 노동자에게 노인, 장애가 있는 노인, 노인의 가족을 위한 기구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기술 및 빌리는 방법 등의 장기돌봄 기술의 보급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고령사회(1995-2005): 장기돌봄보험시스템이 설립되었습니다. 노인 보조/복지 기술의 적용을 위한 새로운 재정적 지원이었습니다. 또한, 노인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사회기본조치법이 각 부처의 협동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 기본법을 근간으로 고령사회조치가이드라인이 생겨났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거주, 교통, 수입, 교육, 사회참여, 생활환경 및 근로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2005년에는 테라피 로봇 파로(PARO)가 만들어졌습니다.
- 초고령사회(2006-현재): 재활 로봇과 로봇 수트와 같은 많은 신기술이 생겼습니다.

“후쿠오카 100(2017)”은 모든 시민이 100살까지 사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0 사회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을 결합합니다. 일본 정부는 기술 달성의 혁신을 이용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위한 조치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우리는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고령친화도시는 교통, 주거, 사회 참여, 존중과 사회 포용, 시민 참여 및 고용,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지역사회 지원 및 의료서비스, 야외 공간 및 건물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된 포괄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리터러시와 커뮤니케이션 로봇은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의 영역에 속합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 백서 2021(White Paper of Aged Society)에 따르면, 미국, 독일, 스웨덴과 비교했을 때 노인의 인터넷 쇼핑, बैं킹, 전자 정부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도표는 일본이 고령친화도시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영역에서 아직 발전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노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및 인지 능력이 감소한 노인의 사회적 포용을 위해, 성인 후견인 제도와 디지털 기술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후쿠오카 100’ 계획에 따라 빅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건강보험, 장기 돌봄 보험 및 거주자 등록 시스템의 정보를 통해 커뮤니티 통합돌봄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장기돌봄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후쿠오카시, 기업 및 대학교의 협력으로 데이터 관리 프로젝트가 시행될 수 있었고, 시민이 개인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 관련 신용 사기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결론: 보조/복지 기술의 혁신은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인간애(humanity)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장기돌봄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포용적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뉴노멀(new normal) 삶의 형식 내에서 이를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 알지 못하고, 할 수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박영란 교수: 한국 노인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 인구통계학적 상황, 문제 및 요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출산율은 0.78%를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940만 명으로 현재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60년에는 40.1%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8.3%입니다. 활동적인 노화 및 건강한 나이들을 위한 정책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된 노인 문제로 노인빈곤, 고립, 질병을 꼽을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국은 노인관련 국제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에 참여해 왔고, 한국 정부는 이 문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고령친화적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약 50여 개의 커뮤니티가 WHO 네트워크에 가입했습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지난 5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 국가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 한국의 노인 정책 개발

노인복지법(1981), 노인복지법(202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2005),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006), 노인장기요양법(2007), 사회보장법 개정(2012), 치매관리법 (2011)

- 한국의 정책 동향: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 AIP), 노인을 위한 근로활동 생성, 연금 개혁,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국가 치매 책임 프로젝트, 스마트 케어

중앙/지방 정부, 기업 부문, 연구 기관 및 대학이 함께 이니셔티브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선언된 후 한국 정부는 본 부문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이니셔티브를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의 개발을 가속했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의 종사자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는 의학 기술, 재활 기술, 에이지테크(age-tech), 복지기술(wel-tech), 보조 공학 및 에이블 테크(able-tech)등의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공공 건강 센터, 치매 예방 센터 및 노인 기관에서 태블릿과 새로운 기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노인의 안녕을 확인하기 위해 노인에게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독거 노인을 위한 동반자 로봇 연구(2021)에 따르면, 우울증 점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은 가격 및 관리 문제가 존재합니다.

스마트 양로원 프로젝트는 여러 센서의 설치 및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의 침대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 돌봄 제공자가 착용할 수 있는 로봇을 착용하여 노인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돌봄 노동자에게서 기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반응이 모두 보였습니다. 다른 지역, 서비스 지역, 사람 간에 나타나는 큰 격차가 존재하는데, 사회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디지털화된 나이듦에 관한 미래 지침: 모두를 위한 기술을 위한 비전

- 국제 파트너십, 혁신적 프로젝트

- 서비스 디자인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거시적, 중시적, 미시적 혁신: 확실한 자원 분배를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구조적 재구축,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용 디지털 리터러시 훈련

- 증거 기반 디지털 서비스 모델 개발

-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60대 및 75세 이상 노인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접근 및 사용에 있어서 뒤처져 있습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몇 년 전 "디지털 권리는 인권"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18개국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고, 참여자들은 자국 내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결론: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하며, 다른 국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선진국과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국가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 질의 응답 및 토론

Takeo Ogawa 교수: 장애를 가진 많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노인은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작동할 수 없는데, 국가에 노인 장애인을 위한 ICT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이사장: 질문은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작동시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야날로그 서비스 옵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Stiel 박사님의 결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선언할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란 교수: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다양한 소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한 지역에서는 실제로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는 간병인들에게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돌봄자(교육자)을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봄자는 중간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시작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로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에도 싱가포르의 디지털 앰배서더와 유사한 개념의 노인학 도슨트라고 불리는 포지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인을 대상으로 로봇 및 인지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기술에 교육하고 있는데, 다양한 유형의 교육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rne Henning Eide 박사: 장애는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디지털화란 곧 해방을 뜻합니다. 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디지털화 참여 우대책은 많지만, 물리적 또는 인지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장애를 가진 10억 명 중 상대적으로 소수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중간 정도로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말로 디지털화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와 AI는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움직이는 기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손상을 줄이는 문제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손상이라는 뜻은 디지털 배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어 무엇이 작동하는지와 그렇지 않은지를 식별하기 위해 서로에서 배워야 합니다. 효과적인 접근법을 식별하기 위한 좋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혁신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상이며,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에게서 혁신에 대해 광범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서로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한 저, 중소득 국가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매우 낮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요소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Carol Ma 교수: Gerontech 여전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박영란 교수님이 복지 기술과 같은 여러 다른 이름에 대해 짚고 넘어가신 이유이기도 하죠. 저 또한 Gerontechnology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단어라고 주장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WHO 보고서에 나타나듯 '보조적 기술(assistive technology)'과 같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보조적 기술이 어떻게 건강한 노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보조적 기술은 노인의 이동성과 삶의 독립성을 촉진하니까요. 장애를 가진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성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동 휠체어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가가 이러한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 중인 국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서로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장수(longevity)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러한 기술은 비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이터치(high-touch), 하이테크 및 저예산 기술을 만들어야 하며, 브로드밴드 및 와이파이와 같은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부 대표자들이 몇몇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하게 하고, 지역 통신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박영란 교수: 독일에서 노인의 권리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가족, 노인, 여성 및 청소년 부처에서 나온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복지부가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디지털 격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Janina Stiel 박사: 독일 교육부도 평생 학습을 촉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이 얼마나 긴지를 감안하면 이 전략은 은퇴를 한 시점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직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말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와 한국 발표에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을 교육한다고 하는데, 독일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누가 급료를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 케이스에서 고령 사회조치기본법이 언급되었는데, 정부가 모든 사람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도 유사한 시스템이 있지만 젊은층이 대상입니다. 또한 고령화 부분을 어떻게 주류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오프라인 비율은 1%뿐인데 이 숫자를 어떻게 달성했는지도 궁금합니다.

Carol Ma 교수: 싱가포르는 노인들이 더 긴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은퇴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의미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인 중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료 기기를 사용하고 싶다고 저희에게 알리는데, 그 이유는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노인의 요구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미시적 일자리(micro jobs) 개발의 기본 아이디어는 노인들과 그들의 시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은 곧 시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채팅 그룹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팅 그룹에 보낸 기술을 볼 때마다 우리의 리빙 랩(living lab)에 어떤 것을 넣을지 고려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노인들의 의견입니다. 초기에 우리는 이 미시적 일자리의 개념을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자원봉사로 활동할 때는 언제나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얼마간의 급료를 통해 노인의 활동이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퇴한 사람들도 매우 바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박영란 교수: 한국도 비슷한데요,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 형식입니다. 한국에는 노인을 위한 소액 수당 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더 많은 경험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는 이러한 일자리 프로그램에 맞는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유형의 노인 시민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인 동시에 파트타임 근로자로서도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전달이 끝이 아니고, 항상 살펴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직무를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유형의 자원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